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2015. 9. 7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한국 여성계나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마더센터’가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독일의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현재까지도 마더센터는 ‘마을 안 여성 공간’ 모델로 큰 상징성을 갖는다. 왜 마더센터가 독일에서 시작되었을까? 독일의 여성과 육아환경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키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 한국형 마더센터의 가능성

1) 독일의 마더센터, 엄마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

독일의 마더센터(MINE, 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 for Empowerment)¹⁾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0년 초에 독일의 부모교육 과정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 DJI)의 열의와 참여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다듬어지면서 ‘마더센터’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 시작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마더센터를 꾸릴 공간과 재정 문제는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산이었다. 센터의 창립 회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만나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가능성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독일 사회에서는 기존의 기관 중심의 복지 체계와 전문가주의의 벽이 매우 공고했다. 그러나 엄마들과 여성들이 다년간 끊임없이 요구하고 설득하면서 장벽들

1) 독일 마더센터 홈페이지 <http://www.mine.cc>



을 허물 수 있었다. 이렇게 ‘마더센터’ 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 곳이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로부터 마더센터 운동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는 독일 안에서는 물론 유럽,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번진 ‘마을 안 여성 공간’ 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마더센터는 전 세계 25개국에 걸쳐 1000여 곳 이상 설치되어, 각 나라마다 현지의 욕구에 맞게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한국형 마더센터의 발전 가능성은?

마더센터는 ‘엄마’ 라는 이름에만 갇혀있지 않다. 아이를 둔 엄마들의 모임이 그 시작이기는 하나, 마을 안 여성과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성장해왔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운영과 정책결정에도 이해당사자라도 참여하는 등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동시에 든든한 지지도 받는 곳이다.

국내 여성계나 시민 단체들도 마더센터에 주목하며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독일을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늘었다.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여성회가 2013년에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를 마을기업으로 띄워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더 많은 마더센터 실험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할 ‘마더센터’ 모델에 대한 연구가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진행된 바가 없었다.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마더센터가 회자되고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그 이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독일 마더센터에 대해 아는 정보가 한정되고, 국가적 토양이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형 모델로써 성장 가능성조차 가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마더센터에 관심을 둔 서울시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준비모임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꾸렸다. ‘마더센터’ 를 공부하면서 현실화의 그림을 그려보고, 한국형 모델로까지 제안해보려고 엄마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서울시 마을박람회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춘천여성협동조합의 앞선 경험과 서초구 동네한바퀴의 또 다른 실험도 같이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독일의 육아 환경, 한국과 다르다? 닮았다?

1) 저출산 ‘속얇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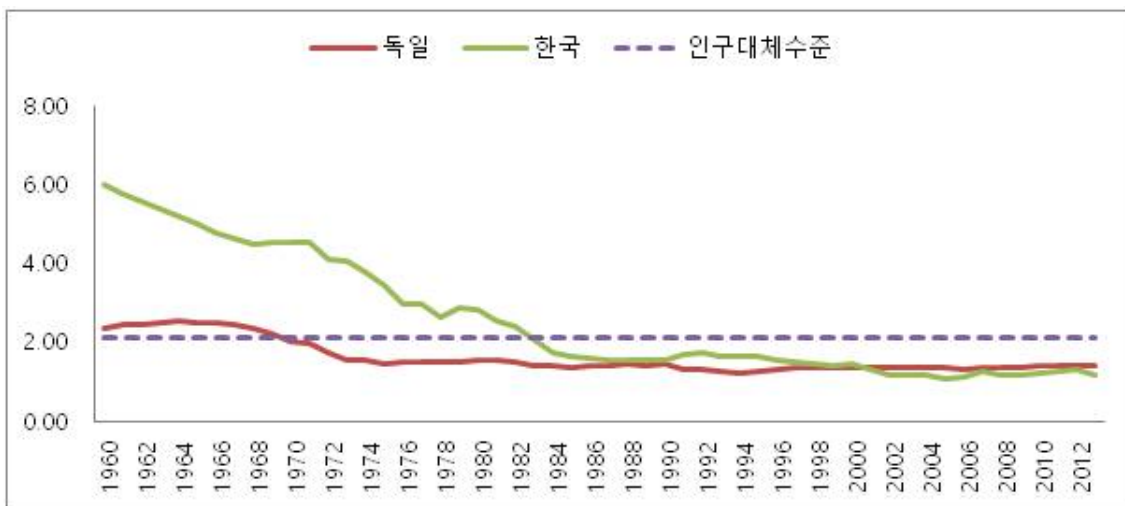
마더센터 연구를 시작하면서, 독일에서 왜 마더센터가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부터가 가장 먼저 궁금했다. 마더센터가 시작된 당시 독일의 여성과 육아 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의 토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었다.

독일 사회는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닮아 있었다. 우선 독일과 우리는 분단국가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두 나라 모두 낮은 출산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비슷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이 감소하리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자. 지속가능한 인구대체수준 2.1명 아래로 떨어진 시기가 독일이 1971년이고 한국이 1984년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10년 먼저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2.0명 내외인 것과 비교해, 두 국가 모두 낮은 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994년 1.24명, 2006년 1.33명으로 두 번의 고비를 겪었다. 이후 독일은 2013년 현재 1.41명으로 조금 회복한 상태다. 한국은 2006년 1.12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큰 변화 없이 2013년 현재 1.19명으로,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림1 참고).

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 독일과 한국 비교



출처: OECD familydatabase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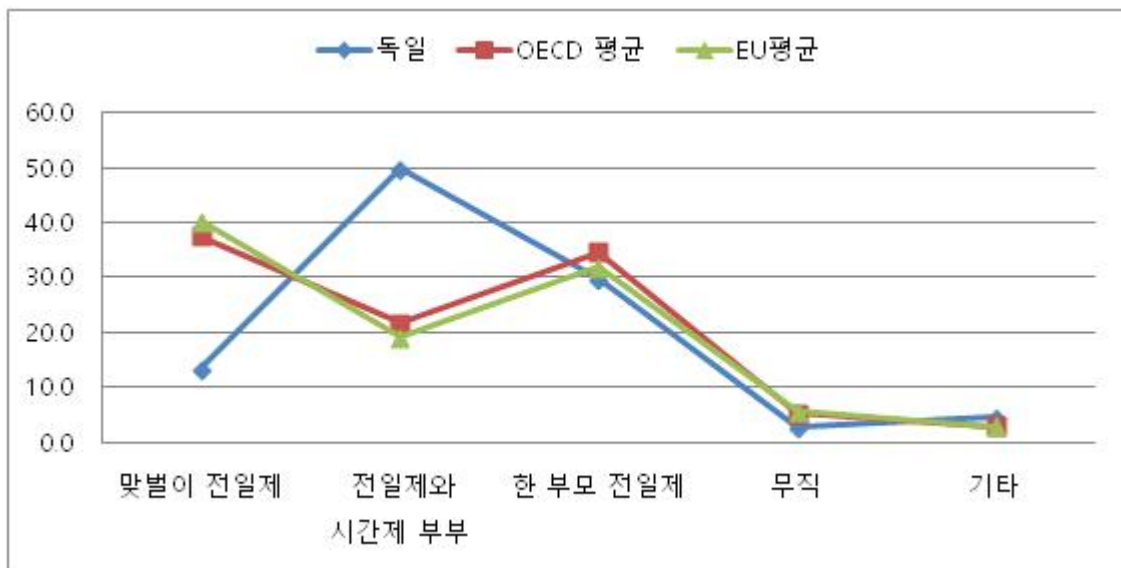
2) OECD 가족통계,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 여성, 일가정 양립 어려워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각 나라의 대내외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최근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요인 때문이라는 진단이 힘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슬픈 사회 현상이기도 하다.

그림 2. 독일 가정의 고용형태(2011년)



출처: OECD familydatabase

독일의 고용형태³⁾를 보더라도 독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엿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맞벌이 전일제 비중이 13.3%로 OECD 평균 37.6%, EU 평균 40.4%와도 24.2%p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 가정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 부부의 고용형태가 49.7%로 가장 일반적이다(그림2 참고). 이러한 현상은 부부 모두가 전일제로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현실과도 많이 닮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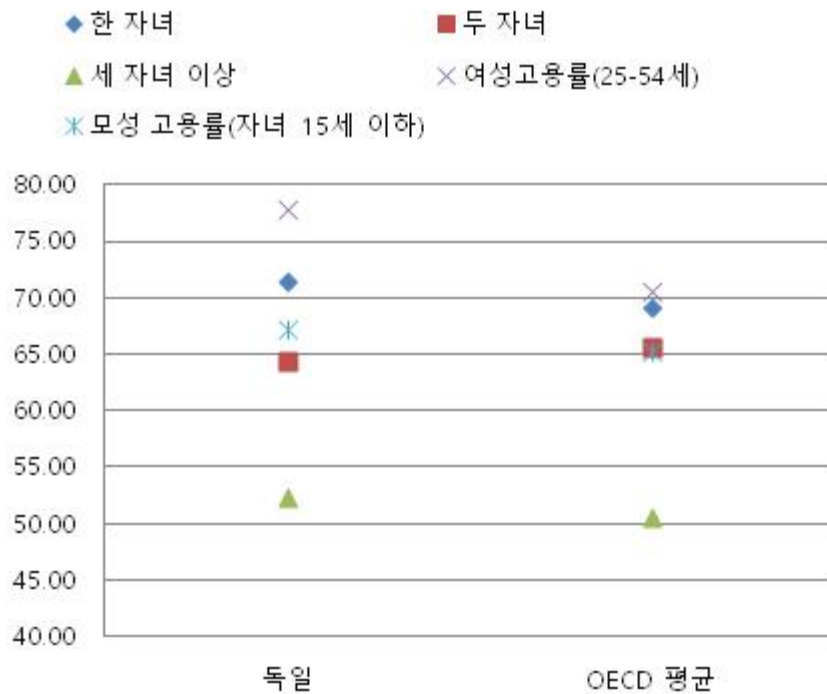
독일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77.9%로 낮지 않다. 이에 반해 독일의 모성 고용률은 67.2%로 전체 여성 고용률과는 10%p 이상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모성의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 자녀일 때 모성 고용률은 71.45%, 두 자녀일 때 64.42%, 세 자녀 이상일 때 52.26%로 감소한

3) 임종현·한형서, “메르켈 정부 수립 이후의 복지정책 변화와 방향”,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2호, 2011.



다(그림3 참고). 이처럼 독일 사회에서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성이 일을 계속 이어갈 기회도 같이 상실해감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불황과 높은 실업률 등의 영향도 크다. 여성들이 한번 일을 놓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기가 어렵기는 독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림 3. 자녀수별 모성 고용률 비교(2011년)



출처: OECD familydatabase

3) 만0~3세 보육시설 절대적으로 '부족'

독일 안에서도 동독과 서독 간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육아관이 달라, 육아 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서독에서는 엄마가 3세 이전까지 키워야한다는 전통관이 매우 강하다 보니 현실적인 요구와 다르게 영아 대상의 보육시설이 확대되지 못했다.

독일과 한국의 연령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원율을 보면, 독일의 만3세 미만 아이들의 공식 보육시설 등원율과 그 이상 연령대 이용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만3세 미만의 등원율만 보면, 한국은 50.5%인데 반해 독일은 23.1%로 한국의 절반 정도다. 독일의 영아 대상 보육시설 이용률은 OECD 평균 32.6%보다



10%p 이상 낮다(그림4 참고).

이처럼, 영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되지 못한 탓에 독일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도 직장으로 쉽게 복귀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무상보육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돌보던 영아들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현상과는 대비도기는 하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말과 행동이 미숙한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냥 안심되는 것만은 아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육아 환경에서, 끊이질 않는 아동 학대 문제는 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큰 걸림돌이 된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림 4. 연령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원율(% , 2010년)



출처: OECD familydatabase

4) 메르켈 정부, 부모의 양육 참여와 공적지원에 ‘적극’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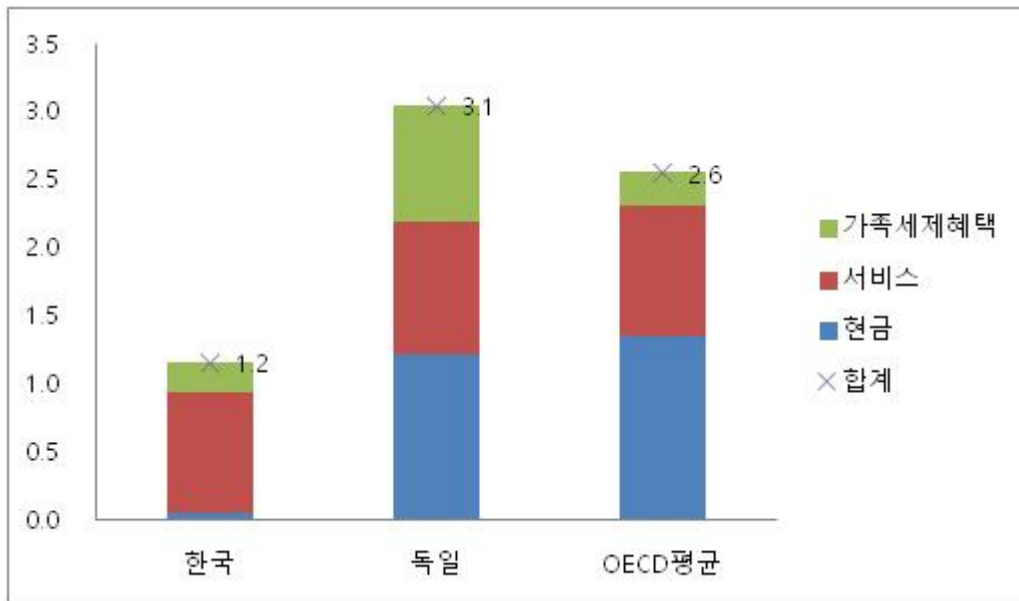
우리보다 앞서 고민을 시작한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가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자녀수당도 자녀수에 따라 상향조정하며 지급 연령도 18세로 늘렸다. 또한 육아수당과 육아휴직 규정도 정비해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법적 보장을 받도록 조정했다. 그러나 육아비용을 덜어주고, 여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현금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양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2005년 메르켈 정부가 수립되면서 부모 모두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의 가족정책을 세웠다. 2007년부터 연방부모휴직수당제도를 강화해 휴직 전 부모의 소득과 연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모 모두 육아 휴직제를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당 30시간까지 임금노동도 허용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3세 미만 아동들의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여성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다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한 정책을 마련했다. 2013년까지 3세 미만 아동의 35%가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림 5.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 , 2011년)



출처: OECD familydatabase

독일은 GDP 대비해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저출산의 위기감을 우리보다 10년 앞서 경험한 만큼, 가족이나 아이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가족세제 혜택이 높은 편이다. GDP 대비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이 한국의 경우 1.2%인 반면 독일은 3.1%이며, 이는 OECD 평균 2.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그림5 참고).

그럼에도 독일 사회에서 만3세까지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모성 중심의 전통적인 양육관이 변하고, 메르켈의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통일 독일을 이뤄내긴 했지만, 동독과 서독의 가치관의 차이도 크고, 통일 독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출산에도 영향을 주



고 있다.

마더센터의 시작과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독일의 육아 토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언뜻 보기에 1980년대부터 싹튼 마더센터 운동이 여러 면에서 독일 사회에 던진 파장이 꽤나 커 보인다. 엄마와 여성이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된 ‘마더센터’의 철학과 선명한 색깔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더센터 실험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9월 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①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② 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 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①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고용,노동	7/24	2015년 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김수현
지역,사회	7/27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강세진
고용,노동	8/3	서비스 · 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②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③	강세진
고용,노동	8/24	2015년 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김수현
경제	8/31	빈곤의 정의와 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최정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